

제 29회 정기포럼

자원봉사 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일시: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14시 ~ 17시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주최: 한국자원봉사포럼

후원: 여성부,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하였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조해녕(前 총무처, 내무부장관)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김길수(새마을중앙연수원교수)

김연수(다일복지재단 이사)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경춘(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중소기업은행 연수원 교수)

이강현(볼런티어 21 소장)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최순식(성남시 부시장)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간사: 박신영(前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교, 남서울해외봉사단)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 차 례 -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헌장.....	2
발제 및 정책설명 1.....	3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 관리 사업계획” - 김종승(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장)	
발제 및 정책설명 2.....	8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인증제도 추진” -김철휘(여성부 협력지원과장)	
지정토론 1.....	14
“자원봉사인증제에 대한 토론” -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2.....	17
“자원봉사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김성경(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3.....	21
“자원봉사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25

포럼 일정

▶ 개회식(14: 00 ~ 14: 20)

사회: 이성철(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국민의례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인사 ——조해녕(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전 총무처·내무부장관)

▶ 주제발표(14: 20 ~ 15: 20)

좌장 :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자원봉사 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발표자:

김종승(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장)

김철휘(여성부 대외협력과 과장)

▶ 휴식 ——(15: 20~15: 40)

▶ 지정토론(15: 40 ~ 16: 20)

·토론자: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경(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전체토의 및 폐회 (16: 20 ~ 17: 0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 관리 사업계획

김종승(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장)

I.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개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해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의 전국적인 관리
- 중앙 및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총괄관리 : 자원봉사활동 기관 등에 대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위촉 관리

1. 추진배경

- 자원봉사의 개념을 전환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마련
 - 개인의 일방적 「희생과 보람」에 「인정과 보상」을 가미한 인센티브 개념 도입
- 개인별 봉사활동을 단체·지역·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대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원봉사자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2001년 UN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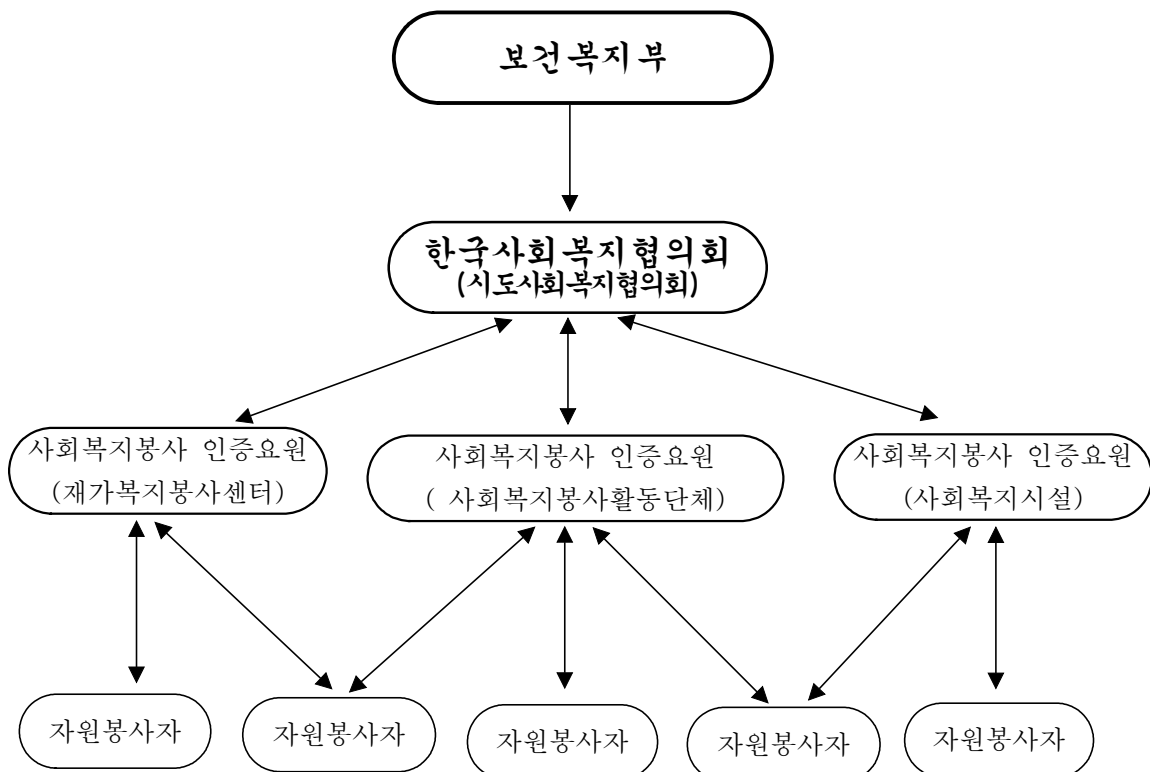
2.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

3. 사업추진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행 : 자원봉사 활동기관 등(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
- 시행시기 : 2001. 11(봉사실적 2001. 1 실적부터 입력)

4. 복지봉사 실적관리 운영체계도



5.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 주요 기능

- 자원봉사활동 참여 신청요청 및 연결조정
- 사회복지봉사자 개인별 활동실적 등록정보의 전산관리 및 조회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실적 정책통계 제공
 - 지역별/ 기관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봉사분야별/ 봉사기간별/ 봉사시기별
-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한 정보의 등록조회 및 전산관리

6. 기대효과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계기 마련
- 사회복지봉사활동 활성화 관련 각종 연구개발 기초통계의 신속 제공
-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체계간 유기적 상호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봉사자의 사회적 인정 및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분위기 조성
- 조직적 체계적인 사회복지 인적자원 활용으로 생산적 복지증진 기여

II. 주요추진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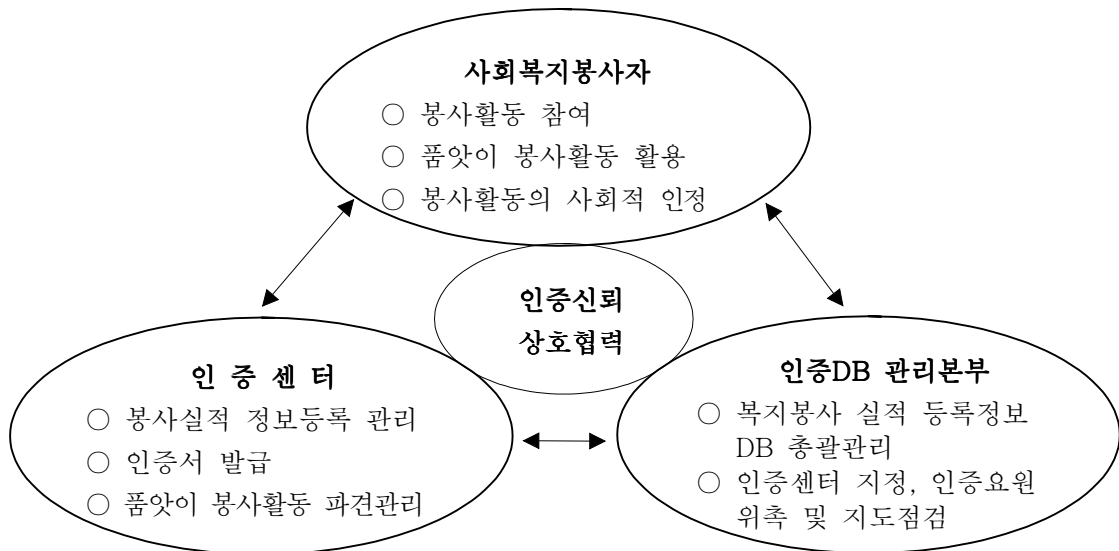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의 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 사회복지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 기여

2. 중점추진사항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전산화 추진
-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의 명칭을 「사회복지정보센터」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 직능별 연합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회원시설 등의 자원봉사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참여 협조요청
 - 직능단체가 자원봉사활동 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S/W 제공
 - 직능별 연합회(협회)장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체계



4. 인증관사업 추진 현황(2001.11.01 ~ 2002.03.14 현재)

(단위 : 개소 / 명)

구 분	인증센터	인증요원	자원봉사자	비 고
계	622	680	30,552	
서울	80	54	7,326	
부산	52	53	2,750	
대구	28	14	1,190	
인천	40	45	155	
광주	49	79	1,849	
대전	26	31	1,956	
울산	20	22	261	
강원	26	28	1,321	
경기	80	123	4,370	
충북	23	31	1,634	
충남	49	64	1,448	
전북	45	46	2,654	
전남	32	35	1,895	
경북	65	27	1,358	
경남	14	15	203	
제주	13	13	182	

※ 참고사항

- 인증센터당 평균 등록 자원봉사자수 : 49명
- 2002년 3월 현재 각 시·도별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양성, 자원봉사자 정보등록 및 인증관리사업 계속 추진중
- 2001.11 ~ 2002.3월까지 제1단계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양성교육, 자원봉사자 정보등록 사항 완료 계획 추진 중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인증제도 추진

김철휘(여성부 협력지원과장)

I. 序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의 해’인 지난해에 출범한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주류를 이루어온 여성들이 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웃과 지역, 그리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라는 여성부의 정책적 목표와도 일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여성부의 중심업무의 하나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출범한 막내 부처로서 안고 있는 적은 인원과 예산, 그리고 집행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여성부 내에서는 물론 여성계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II. 여성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

1. 지원근거

1999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등

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활성화 주요정책

1) 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 및 격려

여성부는 그동안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적인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전문화, 다양화 되는 자원활동의 추세에 맞추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실정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 각종 포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통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여건 조성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각 시도별 추천을 받아 전국에서 약 2만1천4백여명을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3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큰 과제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비가 33%인 10억원에 이릅니다. 물론 절대 금액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 신규 여성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많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수십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온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들과 함께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야말로 미래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모두 87개 대학에서 응모하였으며 그 가운데 34개 대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기본적인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공모하여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자원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봉사자들의 헌신과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6개 시도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의 협력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은 말 그대로 민간의 주도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도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은 물론 미주지역 연수도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민간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일부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2002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 동참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성부는 이들 국제대회를 통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을 높이고 자원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월드컵지원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10개 개최도시별로 총 2천2백여명이 참석하여 외국관광객 안내, 미아보호, 기초질서 캠페인,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Ⅲ. 인증제 도입과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1.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여성부는 자원봉사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후에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우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자원활동에 참여했다는 점과 자원활동을 마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사후지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로 각 지역별로 자원활동수첩 등 나름대로 자원활동을 인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 곳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원활동가들이 지역을 옮길 경우 그 동안의 활동실적이 이어지기 어렵고 정보제공의 한계 등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 여성부의 인증제 추진 노력

여성부는 작년부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확대, 실질적인 DB와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봉사자와 수요처간의 욕구가 일치되는 서비스 연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인증제 도입에 따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 년도인 올해는 민간 전문가들의 활발한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차 년도인 내년에는 올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차 년도인 2004년도에 자원봉사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는 등 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WOMEN-NET과 연계한 자원활동 활성화

여성부는 올해부터 가동하게 될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종합정보망인 WOMEN-NET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여성정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WOMEN-NET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노력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여건을 한층 성숙시키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인증제 모델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IV. 結

여성부는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21세기 시민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원봉사가야말로 이제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벌이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해야할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

다고 보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여성부 핵심업무의 하나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 인증제 도입 역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증제에 대해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원봉사인증제에 대한 토론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인증제는 자원봉사의 철학과 관리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인은 자원봉사는 금전적 대가 없이 가급적 나눔과 봉사 그리고 즐거움과 창의성이라는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민간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국가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은 통합성과 체계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본인은 또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자원봉사진흥법(가칭)도 그런 맥락에서 방향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자원봉사자는 그가 들인 시간, 노력,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써 삶의 보람, 자긍심, 사회적 연결 등 정신적인 만족에 그치고 가급적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반대급부는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책입안자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중간관리자)는 가급적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도 대학생이나 노인 등 다소간의 소득이 필요한 경우의 자원봉사는 금전을 지급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원봉사란 말을 자제하고 '지역사회개발' 혹은 '사회참여'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가정도우미 제도도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유급봉사자/무급봉사자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자원봉사계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인증제가 추구하는 '복지봉사 품앗이' 개념은 서구에 많은 예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역통화(cummunity

currency, time dollar, talent bank)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폼앗이'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한다는 뜻이 있다. 제한적인 지역에서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폼앗이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국가에서 후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가급적 전국적인 통합체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인증제는 오히려 작금의 분리체계에서 자원봉사가 관리되는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여성부 등인데 상호간에 연계가 거의 없다. 한편, 시민운동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무급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기관에서 유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선거운동도 훌륭한 자원봉사이나 아직 자원봉사의 힘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당분간 자원봉사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의 인증제 도입은 이러한 분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인증센타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인증서 소지자와 미소지자간에 차등을 야기시킬 위험도 있다. 민간의 자원봉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주도의 포괄적 인증제도 도입은 각개약진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자원봉사의 발전방향은 보상과 인정 쪽보다는 질 관리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질 관리만 잘 되면 보상과 인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성인 전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에서 인증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개호서비스를 위해 자원봉사은행제가 잠시 도입되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개호보험법에 흡수된 경험이 있다. 자원봉사 인증서를 할

인점에서 캐쉬백 카드 식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재고해야 한다. 무급의 비영리 활동을 영리를 추구하는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원봉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자원봉사촉진법 제정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향후 정부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자원봉사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지원,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에 따라 의미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개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제도 개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개발 등이다.

“자원봉사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김성경(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자원봉사 인증관리제도, 적절한가?

자원봉사활동은 임금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무임금활동이지만,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정과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이미 다양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UNV는 「자원봉사와 사회개발」 보고서(1999)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 하부조직에도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지원들은 그 국가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자원봉사를 위한 지원」 보고서(2001)에서는 ‘자원봉사증명서’를 제안하여 자원봉사자의 기여와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확인서를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와 상황에서 기존의 포상제도와 다양한 인정 및 보상제도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체계를 확대한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인증관리 DB시스템을 이용한 인증

관리제도와 자원봉사활동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의 필요성을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의 개념을 전환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마련. 개인의 일방적 「희생과 보람」에 「인정과 보상」을 가미한 인센티브개념 도입.

둘째, 개인별 봉사활동을 단체·지역·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연대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

셋째, 자원봉사자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넷째, 2001년 UN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

그리고 여성부에서는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후에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자원활동에 참여했다는 점과 자원활동을 마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사후지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지역별로 ‘자원활동수첩’ 등 나름대로 자원활동을 인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 곳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옮길 경우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이어지기 어렵고 정보제공의 한계 등도 많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인증제 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서 지적하는 필요성은 사실 자원봉사 인증제의 필요성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의 공헌과 기여가 인정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 등은 자원봉사센터의 공식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와 자원봉사자의 욕구 충족이 인증서와 인증관리제도로 가능한가 하는 것 역시 의문이다.

따라서 인증관리제도가 필요한가는 사실 좀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인증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단지 자원봉사센터가 대면적인 서비스 없이 전산망으로만 운영된다던가 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수요처에서 인증제도와 인증관리DB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자원봉사 인증제의 유용성과 문제점

자원봉사 인증제의 유용성은 우선 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강조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에서 중요한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자료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자원봉사 인증제의 위험은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인정과 보상이 시간만을 고려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정기준을 혼합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인증

센터라는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의 경우에는 수요처, 즉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인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서(certificate)를 발급하는 것이지 이를 인증서(creditation)가 아니다.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정보의 입력, 전산관리를 담당할 인증요원이 어떤 자질과 자격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설정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다양한 인정 및 보상제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비공식적 인정도 매우 중요한 인정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공식적인 보상제도가 그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인증제 도입에 앞서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된다. 즉 인증센터와 인증요원에 대한 인증이 더 요구된다. 개인적 가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측정이 달라진다면,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가 도입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합의된 제도의 필요성과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급직원들의 경력은 다양한 직장에서 발급되는 경력증명서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증명은 단일화된 DB를 통해 발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하며,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제도에 앞서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인증제 어떻게 봐야하나?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문제제기

1. 사회복지협회의 역할 중 중요한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기관, 단체)들이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동관심을 갖게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며, 또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합조정하면서 협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전문매개체계(professional change agent system)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늘의 “사회복지봉사 인증제”에 관한 내용을 개발하면서, 관심 있는 행자부, 여성부를 비롯한 시민들이 공동관심사인 “자원봉사인증제”에 대한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토의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조성하고, 한국자원봉사포럼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 더불어 한국의 자원복지봉사활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토론의 장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전 시민(다양한 기능집단)들이 공동의 복지목표(생명존중과 사랑, 정의, 자유, 평화, 행복)를 위해 역할 분담하면서 협동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봉사 인증제”를 구상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대로는 안 되고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전제로 하고, 그 일부의 내용으로 충분한 연구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봉사 인증제”의 기본발상과 진행과정의 문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시한 내용만을 보면 1) 자원복지(봉사) 실천자를 위한 차후의 혜택, 2) 활동실천자의 실적관리, 3) 관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전문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분야의 일 중에서 비전문가의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 좀 폭넓은 복지개념을 생각하면서 국가차원의 자원복지(봉사)이념과 철학, 그리고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가의 자원복지(봉사)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혜가 아쉬움을 절감한다. 또한 그 진행과정을 보면 전문기관으로서의 매개적 역할에 소홀한 감이 있고, 인증제의 기본발상에 있어서도 단순히 활동 참여자에 대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획하는 것은 자원복지(봉사)활동의 본질을 혼미케 하는 처사로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봉사 인증제”가 각 부처와 각 단체의 이기적 경쟁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누가(어느 기관) 먼저 “자원봉사인증제”를 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발된 새로운 인증제가 기능집단들과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유하면서 협력하게 하여 우리의 자원복지(봉사)활동이 바람직하게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로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원복지활동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발전게 하면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향해 시민(기관)들이 협력하고 통합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각각의 운영내용이 다름에 따라 활동원들의 불평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들간에 강등관계가 조장될까 염려가 된다.

4. “사회복지봉사 인증제”는 각 부처별로 따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각 부처별로 운영할 경우 각 부처간에도 이것으로 인해 협조관계보다는 갈등 혹은 경쟁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각 부처와 관계된 기관(단체)간, 그리고 자원복지활동원간에도 패가름 혹은 집단이기주의적 생각과 경쟁심으로 참여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기관)간에 화합과 협력을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원복지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감 할 수 있다. 또 계획의 의도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인증제를 악용 할 우려와 활동원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자신(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활동으로 착각하여 질적 서비스 발전과 후세교육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협의회가 좋은 토론의 기회를 만들었으니 기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은 물론 보다 고차원의 가치창조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각 부처가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고 세계가 지향하는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1)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원의 수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활동원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문적 지도를 받게 되고,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체험을 하고,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들

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면서 자원복지(봉사)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터득 하게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원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게 함은 물론 그들의 가치창조적 삶으로(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전문적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지금 제시하는 인증제만으로는 문제가 있고 인증제가 마련되려면 그 전제가 (1) 홍보·접수, (2) 교육훈련, (3) 현장배치, (4) 소그룹지도 및 평가, (5)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협동적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속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연합한(종합센터)가 지역사회(동단위)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시·군·구단위, 시·도단위 및 전국수준까지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봉사)종합센터에는 종합정보센터의 설치는 필수조건이 된다 (참고자료:강남대 출판부, 『자원복지(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8).

2) 또 인증제를 마련할 때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오랜 경험을 통한 능력을 고려하여 자원복지(봉사) 지도자육성을 고려하면서 인증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자원복지(봉사)활동 인증제는 기본적으로 활동원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해 하는 내용으로 부각되는 것보다는 활동원들이 분명한 가치창조적 목표(공동의 복지목표)를 전제로 바람직한 활동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포럼 (회원)입 회 신 청 서

회원가입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포럼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를 격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포럼,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번의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자택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휴대 전화		
전자 우편						
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2. . . . 서명: _____						

No 02-_____ (포럼용) 영 수 증 금 액 : 3 만 원 성명 : _____귀하 기간 : 2002. . . . ~ 2003. . . . 상기 금액을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회비 로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 2002년 월 일 한국자원봉사포럼 회 장 조 해 념	No 02-_____ (신청자용) 영 수 증 금 액 : 3 만 원 성명 : _____귀하 기간 : 2002. . . . ~ 2003. . . . 상기 금액을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회비 (☎02-756-1046)로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 2002년 월 일 한국자원봉사포럼 회 장 조 해 념
--	--